

우리나라 재난안전체계의 밈그림을 그린다



김동현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국무총리는 3월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일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획기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큰 밈그림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의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가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 5대 전략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있으며, 그 아래 재난현장 지휘체계 구축, 재난관리표준체계 확립, 재난 대응 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와,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까지 총 망라된 100대 과제가 수립되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의 마련이다. 분산적 재난 관리에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로 전환되며,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재난에 대응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또한 안전기준 등이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둘째,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이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

하고, 그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하여 훈련의 체계화와 상시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훈련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였으며, 훈련 매뉴얼 역시 행동절차(SOP) 위주로 간소화하는 한편 전자매뉴얼, 스마트폰용 앱 등 개발을 통하여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의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가 효율적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안전재정을 확충하고 재난전담조직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위관리자의 재난안전 교육의 의무화를 통하여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다.

넷째,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의 강화이다.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 구성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로서 부처별 해당분야의 위험요소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해보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된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규모 및 구호대상을 확대하고, 구호의 범위에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등 보다 고차원의 안전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다섯째,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적 특징인 국민적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간기업과의 안전문화운동 협력추진과 재난자원봉사리더(coordinator) 양성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있다. 또한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재난안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여섯째, 안전산업의 육성으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증제도의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 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소관 부처별로 100대 세부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필요시 안전감찰제도,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라는 뼈아픈 과거를 계기로 모든 부처와 민간전문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마련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미래의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모습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막 수립한 안전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